

여성 정치참여 확대 겉보다 속이 중요

새정부 장·차관 4명 상징 그칠까 우려
정책결정직 여성할당제도 도입등 필요

새 정부에 여성 장·차관 4명이 기용된 데 이어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여성담당 비서관이 신설·임명되는 등 여성의 고위직 참여의 문호가 넓어지고 있다.

여성장관 가운데 한명은 부동산투기 문제로 일주일 만에 교체되는 잡음도 없지 않았지만 새 내각에서 전통적으로 한명에 머물던 여성 장·차관이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2%에 머물던 여성의 내각점유율은 8%로 경충 뛰어올랐다. 또한 남성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진용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이 신설되고 여성문제 전문가인 정옥순 민자당 여성국장이 전격 기용된 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다.

여성계는 최근의 이런 변화에

대해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상징적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을 몇명 기용한다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저조한 여성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고위직뿐 아니라 중·하위직에 여성참여 확대 △정부기관 및 정당 등의 고위 정책결정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 소장은 “대선 공약대로 여성장관 3명 임명이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당 등에서 여성참여를 명문화해 실천하는



최근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 이제부터”라며 여성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세미나.

실질적인 여성정치 참여의 기틀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와 전국구 여성 공천에 인색했던 것이나 최근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당에서 비록 선거방식 탓이긴 했지만 여성 최고위원을 한명도 내지 못한 것은 당헌·당규에 고위직 여성참여 할당률이 명시돼 있지 않은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6명 가운데 1명을 여성으로 뽑는 한편 인사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 여성을 20% 할당하는 것을 당헌으로 정해 여성 정치참여의 틀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 각 부처, 정당에 이

러한 변화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여성개발원 김선옥 책임연구원 등 정책조사연구팀이 발표한 ‘각국의 공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공직 부문 참여율은 세계 최하위에 이를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0%나 되지 않는 92년말 현재 국회의 여성의원수는 전체의 1.0%, 기초·광역의회는 0.9%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여성공무원도 9급에서만 60%를 차지할 뿐 실재는 전체의 24.5% 수준이고 고급행정직은 5%도 안될 정도로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공직 부문에서 여성차별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85년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95년까지 정부, 정당,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의 지도적 위치에 취임하는 여성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선옥 책임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정부가 △고용에만 국한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평등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여성정책 수행을 총괄하고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처에 여성담당관을 두어 여성공무원 고용의 평등을 실현하는 등 여성의 공직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